

15일 Market Index			
코스피	2666.84	코스닥	880.46
	(-51.92)		(-7.06)
금리 (미국 9년)	3.308	환율 (원-달러)	1330.50
	(-0.121)		(+12.90)

수명 2년 늘자  
암보험료 오르고  
종신보험료 내린다  
02



## 中 조선업 견제 나선 美... K-조선, 반사이익 기대감

美 전미철강노조 등 5개 노조  
中 조선업 부조리 관행 조사 청원  
바이든, 대선 앞두고 응할 가능성  
국내업계 점유율 확대 기회 요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조선업계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인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경우 한국 조선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조로부터 해양·물류·조선 부문에서 중국의 부조리한 정책과 관행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중국 정부가 조선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고, 조선·해운 등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인 뒤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들은 “중국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관행을 통해 해양·물류·조선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해당 산업분야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조선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U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조선업계로 옮겨가고 있다. /유토이미지

STR이 미국 항구에 있는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 미국 내 상선 건조를 촉진하기 위한 조선업 지원책 등도 요구했다.

USTR은 무역대상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친노조 전략을 내세우기 위해 이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해당 청원

이 접수된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관점도 제기된다. 미 해군 정보국(ONI)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약 2325만GT(총톤수)인 반면 미국은 10만GT가 안 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받아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건조 실적과 기술력이 부족하던 시장 초기에 해외 선주들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거나, 중국 조선소 배를 건조할 경우 저리로 정책 자금을 빌려주는 등 자국의 선박 발주를 지원해왔다.

중국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 조선소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 조선사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낮아

져 국내 조선사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사를 제재할 경우 중국 조선사의 원가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사의 슬롯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며 “미국 관련 수송이 증가할 가스선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해 기준 중국 조선사의 선박 인도량은 글로벌 조선사 전체 인도량 중 50.9%를 차지했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28.4%, 15.4%로 뒤를 이었다. 미국 조선사의 인도량은 0.1%에 불과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체들을 제재해 중국으로의 선박 발주량이 줄어들고 하더라도 미국 조선소들이 감소된 발주량을 모두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글로벌 2위인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조선소에 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해운 산업이 GDP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라며 “이번 청원을 통해 중국으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한국 조선사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들의 아심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정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AI(인공지능)엔터를 활용한 동영상, yap TV와 제휴를 통한 서울 시내버스 내 뉴스 제공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2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미디어 역사를 새로 쓸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1. 신입 취재기자
    - ①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 2차 : 취재역량평가 (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 ④ 우대사항
      -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2면에 계속)



## 의료재앙 분수령... 2000명 규모에 정부-교수 강대강 대치

20개 의과대학 교수 집단사직 D-7  
“2000명 증원 풀어야 협의 나설 것”  
정부 “물러서지 않겠다” 입장 교수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포기해야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선 꼭 필요한 규모라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관련기사 2면)

이런 가운데 전공의 없는 병원에 교수들마저 떠나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 ◆ ‘2000명’ 포기해야 협의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20곳의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다.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비대위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25일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 제출을 해야하는 마지막 날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교수들의 사직은 전공의 면허정지

와 의대생 집단 유급 만큼은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비대위 총회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국립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의대가 참석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사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풀고 협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여 ‘이중섭 귀국-황상무 사퇴’ 압박에 대응 부심  
▲ 민주 총선 후보자 한자리에... 이재명 “우리는 국민승리의 도구” /사진 뉴스1

▲ 정우택 낙천 후폭풍... 충북지역 네거티브 여론 ‘위험수위’  
▲ 행안부, 5조4000억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



▲ 국힘, 양산을 김태호 “24시간 달빛어린이집 지정 추진” /사진 뉴스1  
▲ ‘尹허위보도’ 수사 200일... 검찰 칼끝 어디로